

우리나라 해양경계획정 추진현황과 주요 의제

양희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Hee Cheol, YANG

Ocean Policy Institute, KIOST

핵심용어 : 해양경계획정, 황해, 관련상황, 사례연구, 국가간협정

Key Words :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Yellow Sea, Relevant Circumstances, Case Law, State Practice

1. 서 언

한중 정상간 합의에 따라 2015년 개최된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은 첫 번째 한중 해양경계획정의 공식화 작업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동시에,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실무적 협의와 자국에 유리한 논리와 시나리오 개발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차관급 회담 외에 이미 3차례의 국장급 실무협회가 진행되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 간 협의 단계까지도 다양하게 전근될 수 있으리라 본다. ... (중략)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 추진현황의 개략적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해양경계획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계획정이 갖는 특성상 한중 해양경계의 결과는 양국의 정치, 사회(여론)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성적이기 보다는 객관적 틀을 기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해양경계획정 현황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양경계선은 일본과 체결한 북부대륙붕 경계선이다. 동해가 독도문제, 남해가 일본과의 대륙붕 문제로 사실상 조기 경계협정 작업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해역은 한중간 황해를 주요 대상으로 한 해양경계획정 작업일 것이다. 황해 역시 중국의 어업의존도와 불법어업 등의 요소가 장애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양국 갈등 해소를 위한 가장 유력한 작업 역시 해양경계획정이라는 점에서 협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일 수 있다. ... (중략)

한중은 황해에서 어업협정을 통해 어족자원 관리 등 이미 협의의 기제를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양국간 지질적 혹은 지형적 형태 또한 단일의 대륙붕 구조라는 점, 육지의 지형적 형상 또한 유사하다는 점에서 양국의 협상 의지에 따라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데 수월성을 갖추고 있다. ... (중략)

3. 한중 해양경계획정 추진현황 및 주요 의제

한중 간 해양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양경계선 도출을 위한 접근 원칙(방법)의 합의, 기점의 적격성, 양국이 주장하는 특정 이해요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은 포괄적 원칙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사실상 해역의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사전에 양국의 해역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역 비율산정을 위한 폐쇄선의 설정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통계적 신뢰를 갖지는 못한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 혹은 손실 해역이 발생하는 지를 산출하는 것이 보다 쉬운 작업일 것이다. ... (중략)

양국의 특정 혹은 우선시 하는 이익에 대한 대체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양국의 해양경계는 협약이 규정하는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큰 위협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해양경계획정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하는 문제다. 국제법적 틀 내에서 양국의 손익을 적절히 타협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적인 “형평한 결과”에 이르기 위한 작업이다. 즉, “당연히 우리나라의 해역”이 아닌, “한중 양국의 바다”일 수 있는 해역에 대한 협상인 셈이다. 그 과정에서 지나친 감성의 개입으로 외교적 협상과정을 평가하기 보다는, 외교협상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실무적 협상 과정에서는 위에서 적시한 한중간 우선 이익 수용 등의 요구가 전개될 수 있는 바, 해양경계획정 대상 해역 전반에 대한 한국의 ‘우선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해양경계획정은 단순히 수역의 분할이 아닌, 해양을 통한 국가이익의 총합적 가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 First Author : ceaser@kiost.ac, 051-664-3720